

왜 건설산업 혁신인가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구조조정이나 혁신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 시작한다.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조조정이나 혁신이 산업계의 화두가 되었다. 지금 조선과 해운 산업이 그렇다. 하지만 건설산업은 당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5년 건설수주 실적은 사상 최고치인 158조원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늘고 있으며, 국내 주택시장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런 시점에서 왜 건설산업 혁신이 필요한가?

국내 주택시장만 제외한다면, 건설산업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년 5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 실적은 전년 대비 약 40%나 줄었다. 국내 공공 시장은 물량도 정체 국면이지만,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견·중소 기업들조차 공공공사는 수주할수록 적자가 누적된다고 한다.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주택경기는 지방에서부터 침체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쏟아질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건설산업을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과 함께 5대 부실업종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조선과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여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건설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단기 경기 부양책을 요구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요구가 쉽게 수용될 것 같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과 정부를 가릴 것 없이 부채가 늘면서 건설투자 확대 여력도 줄었다.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장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기술 개발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입찰제도 등 저수익 구조를 초래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산업도 조선과 해운 산업에 뒤이은 구조조정 대상 업종으로 전략하기에 앞서 선제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국내 건설시장의 성장 한계를 인정한다면, 해외 건설시장 진출 확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의 확보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체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 건설 정책과 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 미국의 벡텔 같은 종합건설(EC : Engineering &

Construction)업체는 지금 같은 우리의 산업 구조나 법·제도 틀 속에서는 탄생할 수 없다. 우리는 사업 개발과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로 연결되는 건설사업 과정에서 대개 기획/타당성조사/유지관리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설계/설계관리는 용역업체가 담당한다. 건설업체는 시공만 담당할 뿐이다. 사업 개발부터 시작하여 설계/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시공, 유지관리 등 종합건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의 벡텔'을 만들고자 한다면, 칸막이식 업역 규제 철폐와 발주 시스템 개편 등 법·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후진적이고 낙후된 건설 관련 법·제도와 규제의 틀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할 순 없다.

기존의 법·제도나 규제가 건설산업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산업화의 초창기라 할 수 있는 1970년대나 1980년대에는 분업을 통한 전문화가 중요했다. 건설업종도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종만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융·복합의 시대다. 산업간의 경계도 허물어지는 판에 한 개 산업 내에서 수십 개의 업종을 만들어 놓고 배타적인 업역 보호를 외치게 만들어 놓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등 건설 생산체계에 대한 정부 개입도 해외나 국내 민간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법·제도나 규제가 건설산업의 현실과 동떨어질수록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떨어진다. 지킬 수 없는 규제가 많으면 불가피하게 범법자만 대량으로 양산하게 된다. 종합/전문 건설업이라는 배타적인 업종 구분에서 출발한 건설산업도 이제는 융·복합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새로운 현실을 맞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건설산업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은 아직도 부정·비리 내지 입찰 담합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건설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1994년의 「Latham 보고서」 이후 20년 간 민관 합동으로 건설산업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영국은 자국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건설산업 혁신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 혁신 과제도 지금까지 여러 단체, 전문가들이 솔하게 제안했다. 이제는 혁신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 건 한 건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 이전에 우선 '민관 합동 혁신기구(거버넌스)'부터 만들었으면 한다. 정권이나 담당 장관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성 있는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명박 정부 때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혁신, 효율화 등의 수식어가 붙은 위원회가 여럿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지속되지 못한 채 일회성 활동에 그쳤다. 건설산업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성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END**